

특별자치 시·도 “5극 3특 함께 성장해야”

민선9기 첫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전북·강원·제주·세종, 공동성명 채택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특별자치시·도가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자치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추진과 특별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5극과 3특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성장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4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특별자치시·도가 5극 3특 국가균형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사민 왼쪽부터), 위성곤 제주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이원택 전북도지사 등이 맞손을 잡고 있다.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권한이양·재정지원·규제혁신·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2026년 내 조속한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정기회의와 공동성명을 계기로 강원·제주·세종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권한이양과 규제혁신, 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하는 등 특별자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 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발표

가 1·나 5·다 5·라등급 3개… 행안부 제안모델 반영, 등 평가체계 보완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202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1개과 출연기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기관 운영 실적과 사업 성과, 전년 대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는 올해 평가의 변별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으며, 먼저 중앙부처와 도의 평가가 중복되던 군산·남원의료원을 도 평

가대상에서 제외해 기관 본연의 공공의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에 맞춰 지표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지표별 난이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여, 비리·종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 발생 시 감점 및 등급하향으로 평가등급에 엄격히 반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번 연도 경영평가 결과가 가·나 상위등급 비율은 42.85%(14개 중 6개)이며, 가등급은 1개, 나등급은 5개, 다등급은 5개, 라등급은 3개 기관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여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년도 ‘다등급’에서,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올해 ‘나등급’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기관 직원의 과거 음주 상해사고와 이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나등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운영심의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책임이 막중하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장시간 논의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위탁·보조기관 6곳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점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 2곳, 나등급 2곳, 다등급 2곳이 됐으며, 장애인복지원과 교통문화연구소가 ‘가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등급을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 및 기관장 기본연봉에 차등 반영하고 최하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과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공기업·출연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2026년 광역·시군

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치명자신성지 평화의 전당 유랑검찰에서 도내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역·시군 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와 광역치매센터, 시군 치매안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치매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시군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별 사업 성과와 현장 경험을 나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치매관리 현장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지속적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된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치매센터와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행정지원 TF 가동

도-무주군-현대로템 등 3개 반 15명 구성…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핵심 애로 적기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총사업비 3,488억 원 규모의 ‘무주 항공·우주 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전담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도는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TF팀을 구성하고, 금일 키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산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협의 창구를 하나로 모아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TF팀은 사업 성패를 가를 산지전용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지정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도 건설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총괄 운영반(도 지역개발팀) △사업추진반(무주군·현대로템㈜·총괄PM) △사업지원반(도 관계 부서 8개 팀) 등 3개 반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사업지원반에는 도시계획·기업유치·산업조성·산업보호·농지·자연복구지원·물류·유산지원팀이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지구 지정과 산업 착공 때까지로, 매월 정기 회의를 열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절차 일괄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TF팀'을 구성하고, 26일 키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고, 산지전용 완화 방안과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 TF팀 운영 체계를 확정했다.

무주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9월 도와 무주군 현대로템(주)이 민간선단 투자 협약을 맺은 데 이어 6월 30일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도에 올랐다. 이후 8월 10일 추진 상황 점검 회의와 12일 도지사·무주군수 간 협의를 거쳐면서 이번 전담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산지전용 문제는 법에서 평균경사 등 허가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편입 토지 매입과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쟁점 사안도 조기에 조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무주군 적성면 방이리·사천리 일원에 2034년까지 약 36만 평 규모의 민간산업단지와 연결도로(4.3km)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 가운데 454억 원(국비 100억·지방비 354억)은 기반 시설에, 3,034억 원은 현대로템(주)의 민간선단 조성에 투입된다.

도는 올 하반기 각종 영향 평가와 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해 2027년 국토교통부에 일괄 지정을 신청하고, 2028년 상반기 지구 지정·고시와 선단 착공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만호 기자·무주=손홍기 기자

전북도, 국도·국지도 일괄에타 5개 사업 통과… 7516억원 규모

국도 4개·국지도 1개, 총연장 39km… 지역 교통망 확충 기반 마련

20년 숙원 ‘소양~부귀’, 현대차 투자 뒷받침 ‘도도~공덕~대야’ 포함

전북특별자치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내 5개 사업 총사업비 7,516억 원 규모의 사업이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 도도~김제 공덕(국도21호) △김제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남원 인월~산내(국지도80호)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26호)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37호) 등이다. 국도 4개, 국지도 1개로 총연장 39km, 사업비는 7,516억 원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선도로와 지역 주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일괄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에서 계획 반영 대상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일괄에타 대상사업과 비에타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26호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036억 원을 투입해 24km 구간을 4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지역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숙원사업이다. 협소한 도로 여건과 교통 불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주 도도~김제 공덕과 김제 공덕~군산 대야 국도21호 확장사업도 함

게 통과했다. 두 사업은 총사업비 4,530억 원을 투입해 전주 도도에서 군산 대야까지 총 20.4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구간은 도내 국도 구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로 병목과 정체 발생해 도로 확장이 시급한 곳이다. 해당 구간은 전주~김제~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물류축으로, 현대자동차 투자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 인월~산내 국지도80호선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924억 원을 투입해 7.8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무주 설천 심곡~두길 국도37호선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028억 원을 투입해 8.4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일괄에타를 통과한 5개 사업의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에타 사업 9개, 총 3,310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안전, 산업·물류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시행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배달라이더 대상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내달부터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고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노동자·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총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우선 지원한다. 온라인 또는 오

프라인 안전교육 이수자가 1순위이며, 그 밖의 신청자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1차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재보험 근로자별 부과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우선 지원을 위해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팩스나 이메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063-229-10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식육가공·포장처리·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생산·유통 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 14개소, 유가공업 4개소, 알가공업 2개소 등 도관리업체 20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30개소, 축산물판매업 210개소, 식육축적 판매가공업 40개소 등 시군 관리업체 280개소를 포함한 총 300개소다.

/이만호 기자